‘쪼개진’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연내 통합된다

광주시·전남도, 실무 협의 기구 다음달 구성

7년만에 … 나주혁신도시에 사무실 들어설 듯

이르면 올 연말 안에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운영중인 발전연구원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분리 이후 7년여 만에 다시 ‘한식구’가 되는 것이다. 광주시·전남도는 통합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통합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KBC 특집 프로그램인 ‘함께 가는 남도, 희망을 말하다’에 출연 “곧바로 시·도간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 통합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양 발전연구원의 통합 등 역할제고는 양 시도지사가 시도 상생을 위해 합의한 7대 공동정책 의제 중 하나다. 이 공동정책 실현을 위한 실무 협의 기구는 다음달 중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구원 통합은 공동 의제 중 실행 여부가 가장 손쉬운 것이며 쉬운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도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시·도가 함께 가자면서 미래를 연구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합쳐야 커질 수 있고 연구의 내용과 질, 규모 등이 모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과 함께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위원은 15명, 전남발전연구원은 18명으로, 전국 각 시·도발전연구원 가운데 소규모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 발전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해 1995년 6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됐다가 2007년 다시 분리됐다. 당시 분리의 명분은 통합된 연구원이 행정과 발전 방향이 다른 양 시도의 여건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따라 통합 이후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시 갈등으로 드러날 개연성도 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산강 시대 공동정책 수립, 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건립 등 시도 상생을 위한 7대 공동 과제 실천에 합의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명량’ 美 개봉 3일만에 56만2000달러 벌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영화 ‘명량’이 3일 만에 56만 2332달러(약 5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CJ 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

이는 CJ가 북미지역에 직접 배급한 한국영화 가운데 개봉 첫 주 거둔 가장 좋은 성적이다.

이전에는 개봉 3일간 13만 3385달러의 매출을 올린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성적이 가장 좋았다.

CJ는 “‘명량’의 흥행 추세로 봤을 때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최종 흥행 기록(92만 3442달러)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흥행 신기록을 수립한 ‘명량’은 뉴욕, 시애틀, 버지니아 등 북미지역 30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연합뉴스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 사랑해요” 20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4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참가 학생들의 공연을 본 뒤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연봉자 호남권 3.8%뿐

10명중 7명 수도권 거주

작년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호남권의 억대 연봉자는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2012년도 귀속분)을 신고한 직장인 가운데 급여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은 41만5500명(2.6%)으로, 전년에 비해 5만 3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 69.7%(24만 9500명)는 수도권에 거주했다. 서울 19만6700명, 경기도 8만700명, 인천 1만 2300명 순이다. 영남권에는 울산 2만 9000명, 부산 1만5500명, 경남 1만4800명, 경북 1만3100명, 대구 7000명으로 억대 연봉자의 20.1%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는 대전 1만300명, 충남 8800명, 충북 4500명, 세종 600명 등 억대 연봉자의 5.5%가, 호남권에는 전남 5200명, 전북 5000명, 광주 5700명 등 3.8%가 살고 있다. 강원도는 억대 연봉자가 4100명, 제주도는 1200명으로 집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차 보험료 할증 사고 ‘크기’ 아닌 ‘건수’로

2018년부터 … 무사고 기간 1년으로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에 따라 할증된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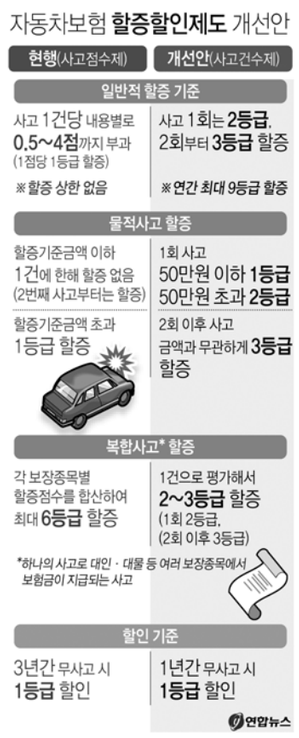
이에 따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이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했으나, 최근에는 물적 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이 보험료가 가장 높고 26등급이 가장 낮다.

/연합뉴스



‘관피아 척결’ 말뿐 … 퇴직 공직자 1218명 재취업

정부 출자·출연 보조단체, 사기업 등으로 자리 옮겨

새정치 ‘관피아 특위’… 업무이관 등 포함땐 1500여명

지난 6월 현재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모두 662개 공직 유관단체나 정부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이하 관피아 특위)가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 전환을 통한 재취업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숫자는 1586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 소관기관 퇴직자 20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기획재정위 175명 ▲정무위 170명 ▲산업통상자원위 130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27명 ▲환경노동위 105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기정 위원장은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에는 사기업 취업제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 협회, 조합, 재단, 연구원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서 “이런 문제가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세부적으로는 국토부의 재취업 기관은 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협회, 철도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21개 유관 협회와 조합이며, 대부분 회장과 부회장, 이사·감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08년 이후 재취업한 55명 중 36명이 대학 총장, 교수, 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나머지 부처 퇴직자들도 대부분 산하기관 또는 유관단체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심각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퇴직자 14명이 10개 대형건설사에, 76명이 철도 관련 설계·감리·시설회사 44곳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수주 순위 20위권 밖이던 한 기업은 공단 퇴직자를 영입한 뒤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경제·금융 관료 역시 대다수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진출해 공정한 규제와 정책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부정부패, 민관유착을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